

## 臺灣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따른 제문제 고찰

김용대 / 경상대학교 교수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거래는 단순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4者회담이나 경수로 건설 등으로 잠시 국제 관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대만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역이용한 북한과의 뒷거래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꺾이고 있는 대남 혁명 역량과 국제 혁명 역량을 다지고, 아울러 한국의 정황과 국제적 상황을 그들의 이해 관계에 맞추어나가려는 전술적 이면이 깔려 있다는 데 우리의 경각심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이제는 온 국민의 총화 단결은 물론, 정부의 이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함께 UN 등 이 문제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각적 협조를 강구하고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지적할 사항은 국가간의 분쟁은 감정적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과거 한중 국교 관계의 개선으로 타격을 입었던 대만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의 추구로서, 대만이 우리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그 행보를 함께해왔던 우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어도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대만의 호의 즉, 대만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 의사를 한국 정부에 통고한 사실 여부를 재삼 살피고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종 방안으로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의 원천적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설득 내지 영향력 행사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만 핵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 머리말

#### 국문

灣 방사성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국내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8 개 원자력 단체와 해

당 기관들의 연구 조사와 아울러 쏘국민의 '한반도의 국제 핵폐기물 처리장화'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 대만 관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사태로 부각되고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즉, 국내의 환경 단체가 일심동체로 반대해 왔음은 물론, 심지어 대만의 환경운동연맹(TEPU) 등 현지 환경 단체들도 이에 참여하여 공동 투쟁으로 접어들었다. 이 문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 문제로 부각되면서 1997년 1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린피스' 타이로 보드 사무총장이 "그린피스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계약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한국과 대만의 환경 단체들의 저지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고,<sup>1)</sup> 러시아의 사회생태연맹북서센터, 남태평양 지역의 환경단체(NFIP), 유럽·태평양 지역 민간 단체 네트워크 사무국(PCRC), 일본의 원자력자료정보실, 대만의 민진당 등이 지지 성명을 냄으로써 국제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sup>2)</sup>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발생한 중국의鄧小平 사망, 북한 黃長燁 노동당 서기의 망명 사건, 아울러 최근 북한의 姜成山 총리의 경질, 그리고 인민무력부의 崔光과 金光鎭이 잇달아 사망하여 북한 내부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를 회색시키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짙어 자칫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 발생한 한보 사태의 여파는 김영삼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중단하게 만든 결과까지 초래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은 이러한 한국 내의 혼란한 政情을 최대한 역이용하여 핵폐기물의 반입 문제 또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차원에서 교묘하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냉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만 방사성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가 단순히 대만과 북한의 순수한 상업 관계로서가 아니라, 대만과 북한의 처해진 입장에서 복합적이고 피치 못할 정치·외교적 목표가 숨겨져 있다는 데 그 해결의 어려움이 내재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의 어려움은 대만이나 북한 모두가 핵문제에 관하여, 1985년 런던에서 핵 관련국들이 모여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억제하는 「런던협약」이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규제를 하고 있는 「바젤협약」 그리고 IAE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당사국이 아닌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대만이나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핵폐기물의 자국 처리 원칙을 대만이 이해하고, 북한으로서도 핵폐기물의 북한내 반입 문제는 한반도 환경 오염의 당사자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

1) 「조선일보」, 1997. 1.30.

2) 「문화일보」, 1997. 2.6.

는 우리 한민족 전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치게 하는 행위인 것이며, '김정일 유일사상'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볼 때에도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북한은 철저히 이해해야 할 줄 믿는다.

본 고에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사항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대만과 북한의 적극적 접근

대만과 북한의 활발한 접근 이유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점은 정치적 목적으로, 우선 대만 입장을 고려할 때 현재 대만이 처해진 고립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므로써 과거 한중 수교시 한국에 당한 보복 심리가 실천에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개심이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 해소라는 북한의 경제 문제와 맞아 떨어짐은 물론, 북한으로서는 대만으로부터의 핵폐기물 반입 문제가 적어도 미국과 한국을 북한의 외교 페이스에 말려들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북한의 접근이 더욱 가능했을 것이다.

기존의 한국과 대만 관계를 살펴볼 때, 최근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서 한국과 중국이

접근을 가속화함으로써, 적어도 대만이 주동적으로 '북한 카드'로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대만으로 하여금 북한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행해진 상대적 결과로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대만의 북한 접근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고 한국의 통일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지를 벗어나, 한국과 대만 관계의 최악의 사태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80년대 이후 의욕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북방 정책'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가속화로서 그 특징이 지워지다시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한중간의 급속한 관계 개선은 가뜩이나 국제적 고립감을 절실히 느끼는 대만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 발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본다. 즉, 1988년 대만 경제부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만과 중국의 관계 완화와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는 정세에서 대만과 북한간의 무역 정책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쌍방간의 직접 무역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sup>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관망하고 있던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

계 개선에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만도 대륙 정세를 고려한 나머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대만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유보하면서 첫째, 대만·북한간의 경제 관계를 서두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둘째, 이제까지 북한이 대만인에 방문 비자를 발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만과 북한의 기업인이 왕래한 경우가 없었고 셋째,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개발 조건도 마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대만과 북한간에 '간접 무역 관계'를 허용함<sup>3)</sup>으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어디까지나 금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의 직접적 계기는 적어도 대만 입장에서 볼 때, 한중 수교 결과에 기인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즉, 1990년 9월 북경 아시안게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한중간의 관계 발전과 10월 20일에는 중국과 민간무역사무소 설치를 합의하게 됨으로, 이러한 사태에 당면한 대만은 기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미 유보시킨 바 있는 북한과의 경제 발전을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음을 감지하여, 소위 '남한·중

국', '대만·북한'의 '교차 경제 승인'<sup>5)</sup>을 주장하면서, 대만의 이해 관계와 부합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접근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으로서도 대만과의 비정치적 경제 관계를 개선한다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었으며, 북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사국들은 아전인수격의 이해로서 소위 '교차 경제 승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과 북한의 경제 무역 관계는 급진전하여 1990년 11월 23일 대만 행정원은 정식으로 북한과의 직접 무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몇일 후 11월 26일에는 북한을 방문하려는 일단의 대만 입법위원 일행과 경제인을 포함한 대만인들에게 북한 관광 비자를 발급해주었다.<sup>6)</sup>

이를 계기로 대만은 "중공과 남한이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한이 상호 직접 왕래를 하고 있으므로, 대만과 북한의 교류가 가능한 것"<sup>7)</sup>이라는 변명과 함께 대만과 북한 관계는 더욱 깊어만 갔다.

3) 「中國時報」(臺北), 1988. 11.6.

4) 「中國時報」(臺北), 1990. 9.27.

5) 「中國時報」(臺北), 1990. 9.24.

6) 「中國時報」(臺北), 1990. 11.23.

7) 「經濟日報」(臺北), 1990. 11.23~24.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만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대만의 노력보다 북한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치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중국으로부터 한중 관계 개선의 양해 촉구와 함께 이의 사전 통보를 접한 북한으로서는 한중 수교가 향후의 피치 못할 예정된 사실임을 간파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면한 현실로서의 대외 관계를 북한에 유리하도록 하는 전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본다. 이는 실천으로 옮겨져 1992년 6월 5일 북한은 극비리에 노동당의 중요 경제 간부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모색한 바 있으며,<sup>8)</sup> 대만과 북한은 회담 결과 양국간에 무역 거래시 요구되는 '사전허가제도'를 폐기하는 등의 발표<sup>9)</sup>를 함으로써 쌍방간의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약속하였으며, 그 이후 대만인들의 북한 관광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북한은 7월 19~25일에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를 한국에 방문시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모색한 바 있어, 통일 전선 전술에 입각한 북한의 이중

구조적 대외 정책 또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한국과 대만이 단교를 선언했을 당시, 대만의 章孝嚴 외교부부장은 “불가사의한 일”이라 언급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의 이면에는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 이후 대만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sup>10)</sup> 대만은 암암리에 한반도 정책을 ‘경제적 교차 승인’이라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펴하게 되었다. 대만과 북한의 이러한 관계 구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1993년 7월 28일에는 북한 선박이 대만에 머물러 대만산 의류품을 선적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태로 이어졌으며,<sup>11)</sup> 1994년 4월의 ‘평양축전’ 행사에도 대만인의 관광을 북한이 승인하여 일단의 방문객이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같은해 5월에 이르러 대만은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외교 목표 하에 기존의 반공 노선을 지양하고 적극적 외교를 천명함과 동시에, 북한에 무역대표부의 성격을 갖는 사실상의 민간 대표부를 개설기로 결정하는 한편, 대만에 북한 무역대표부를 개설함과

8) 「自由時報」(臺北), 1992. 8.22.

9) 「聯合報」(臺北), 1992. 6.13.

10) 1993년 9월~10월 사이, 9월 초에는 대만 입법위원 廖福本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정무원 총리 강성산과 회담을 하였고, 10월 초에는 북한의 국영사업진흥회사 간부 3 명이 대만을 방문하여 영사 업무를 관장하는 무역대표부의 설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1993. 7.27.

11) 「동아일보」, 1993. 7.27.

동시에 대만과 북한간 민간 전세 항공기의 취항을 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대만과 북한과의 직접 교류를 실천에 옮겼다. 핵폐기물의 수입 문제로 북한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해 12월 3일 이전 최근에는 대만이 북한에 농업 협력 문제로 일련의 사절단을 북한에 보내 바 있다. 이러한 대만과 북한과의 접근은 국제 외교에 능한 대만이 달려 외교로서 북한의 발목을 잡는 한편, 국제 사회의 제3세계 국가 등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UN에 재가입하려는 모종의 현실적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 대만과 북한의 적극적 접근 결과는 1997년 1월 11일에 예상외의 사건으로 구체화되어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국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즉, 대만전력공사와 북한 쌍방은 지난 2 개월 동안 극비리에 작업을 거쳐 대만의 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sup>12)</sup> 6만 톤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확정 함의를 보았다는 사실이다.<sup>13)</sup>

## 대만 핵폐기물 처리의 실태와 북한 반입의 문제점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에 주동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만전력공사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장인 蘭嶼島 핵폐기물 보관장이 한계에 이르러, 러시아나 대륙 또는 여타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모색해오던 중 2 개월 전 북한이 반입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대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였다고 한다.<sup>14)</sup>

문제는 북한에 핵폐기물의 반입을 꾀하고 있는 대만으로서 현재 핵폐기물 보관 처리 장소로 유일한 '蘭嶼島'의 핵오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 蘭嶼島는 대만 본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 k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45 km<sup>2</sup>이고 토착 부족인 達悟族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과 관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82년 이후 15 년 동안 매년 발생되는 약 7,400 드럼의 핵폐기물을 운송함으로써, 현재 까지 약 9만 7,000 톤의 핵폐기물을 이곳에

12) 방사성 핵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로 분류하는 바, 전자는 방사성 물질이나 혹은 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종의 쓰레기로 폐기해야 할 물건이다. 즉, 원전의 요원들이 사용했던 장갑, 방호복, 부품 필터 등으로서 드럼통에 보관 후 콘크리트 固化 처리를 거쳐 드럼통형으로 영구 처분이 가능하나, 200~300 년 후이나 방사능이 사라진다. 이외에 병원이나 연구 기관에서도 소량 배출되나 이 폐기물은 핵물질은 아니지만 오염된 방사능이 다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보통 고화해서 철제 드럼통에 밀봉시켜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기체나 일부 액체의 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필터 여과나 증발·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따로 처리한다. 후자인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은 핵연료봉을 태운 후(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95%의 재활용이 가능한 핵폐기물이다(「중앙일보」, 1997. 1.30; KBS, 일요스페셜, '심층진단', 1997. 2.16).

13) 「中央日報」(臺北), 1997. 1. 13.

14) 「中央日報」(臺北), 1997. 1.13.

저장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핵폐기물 최고 한계 보관량은 9만 8,000 톤으로서 대만전력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핵폐기물의 저장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어 6 개월 전부터 저장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방사성 핵폐기물의 심각한 피해<sup>15)</sup>로 인해 지난 1995년 6월부터 끊임없이 전개된 현지 주민들의 시위와 저항에 밀려, 대만 정부는 2002년까지 관련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향후에는 기존의 핵폐기물 보관 장소를 다시 물색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sup>16)</sup> 그러므로 대만전력공사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맺은 계약은 꼭 실행할 것”<sup>17)</sup>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한편으로 대만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蘭嶼島 핵폐기물 저장 장소를 옮길 계획으로 이미 대만섬내 臺東의 達仁, 金峰 지역 그리고 屏東 및 馬祖 지역을 대상으로 제2단계 조사 작업이 끝난 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sup>18)94</sup>

대만의 방사성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따른 심각한 점은 핵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문제와 북한의 핵폐기물 보관과 처리에 관한 문제

인 것이다. 이제까지 대만은 핵폐기물의 자국내 운송선인 電光1號 선박을 이용하여 대만 본성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蘭嶼島에 운송해왔으나, ‘전광1호’의 경우 핵폐기물의 선적 한계량이 800 톤밖에 되지 않음으로, 핵폐기물의 공해상 원거리 운항의 전용 수송 선박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중바닥 구조나 다중 칸막이 장치를 갖춘 엄격한 국제적 기준의 2,000~3,000 톤급 선박이 못되어, 만일 전광1호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하여도 대만·북한이 1차적으로 운송을 약속한 6만 톤의 핵폐기물을 적어도 100 회 이상 운송해야 함을 감안할 때, 전광1호 역시 핵폐기물 전용 수송 선박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990년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총회에서 ‘핵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는 바, ‘방사능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실행 규칙’을 결의해 530호로 채택했으며, “관리·저장 목적으로 핵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능력과 규칙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능력과 체계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제7조)는 것과

15) 1982년 이후 현재까지 방사성 핵폐기물에 의한 현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암환자와 기형아의 발생 그리고 이룸모를 피부 병이나 중풍 등으로 매년 10 명 정도의 사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50 명 정도의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KBS, ‘심층진단’, 1997. 2.16.).

16) 「중앙일보」, 1997. 2.10.

17) KBS, 심층진단, 1997. 2.16.

18) 「中央日報」(臺北), 1997. 1.13.

“핵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시 관련국(반출·반입·경유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는 내용으로서 핵폐기물은 자국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제간 이동시에는 국제 관계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천명하였다.<sup>19)</sup>

이상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 능력을 살펴볼 때, 북한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 1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소량의 핵폐기물에 대한 임시 저장 시설만을 구비하고 있는 형편으로, 선진국 수준의 영구 핵폐기 시설을 구축하여 다량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 처리 비용이나 운영·기술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 북한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 수준의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시설을 갖추려면 이에 필요한 지질 조사와 기초 작업을 거쳐 완공하는 기간만 약 3년이 요구되며, 이에 소요되는 건설 비용이 최소한 700억 원으로서 금번 북한이 대만에 핵폐기물의 반입에서 받기로 약속된 600억 원보다 많은 액수인 것이다.

셋째, 만일 대만의 핵폐기물이 무사히 북한에 운송된다 하여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현재 북한이 핵폐기물의 처분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예정 지역은 황해도 평산의 폐광 처리된 4개 장소로서, 이들 지역에 영구 처분시킬 수 있도록 건설하는 데는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sup>20)</sup> 즉, 북한의 폐광 실태는 채굴 공간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어 갭 내의 방어벽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오랜 시간 관리 소홀로 벽면이 부식되어 붕괴의 위험이 뒤따르고, 여기에 핵폐기물 드럼을 보관할 경우 습기로 인해 드럼통이 부식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 문제는 갭 내의 빈 공간이 지하수의 주요 통로가 되어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지하 수맥을 따라 확산 오염된다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북한의 여타 지역에 혹 단단한 지반에 지하수의 유입이 없는 폐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악한 환경에서 북한이 과연 기술적으로 완벽한 핵폐기물의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가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떨칠 수 없으며, 이제까지 북한이 도모해왔던 대외 관계의 제반 속성을 근거로 할 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항상

19) 「중앙일보」, 1997. 2.5.

20) 「중앙일보」, 1997. 1.30.

21) KBS, 심층진단, 1997. 2.16.



구사하는 전략·전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핵폐기물 북한 반입의 전략적 근거

대만과 북한의 관계 개선 시각에서 본 핵폐기물 반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현재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 상황에서 지극히 한정적인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으로서 대만과의 경제 관계 발전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손실을 결코 바라지 않으려는 궁극적 정치 목표를 저변에 깔고 있으며, 대만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순수한 경제 관계 이외의 정치적 미묘한 사태까지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한국·중국, 북한·대만의 관계가 비정치적 경제 관계에서는 해당국들의 노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해결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국제 문제의 사태 추이는 중국의 대내외적 이해 관계에서 결정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행사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고, 한중간의 경제·사회적 협력체제를 인정하면서 현

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결코 중국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보증하는 외교적 태도를 보였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대화와 평화적 결합의 교섭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우의를 약속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관계 개선을 보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경제적으로는 남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국, 남북한 공히 중국의 입장에 따라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보장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는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대소사가 중국·미국·일본의 역학 구도 속에서,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여 조건지위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의 도움으로, 한정적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관계 수립과 이와 병행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교류를 통해, 북한에 점진적 개방과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과거 북한과 서방 국가들의 무역 거래를 살펴볼 때, 채무 이행의 불능으로 인해 신뢰도가 약해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원자재와 기술 및 자본재의 부족으로 북한 산업 활동은 침체 또한 심각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궁여지책으로 대만과의 관계 개선 및 가능한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써,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의 수입이라는 졸속적 방법을 강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북한의 전략 전술적 외교의 제반 행태는 몇해 전 북한이 남한 고립과 쌀분제 해결을 위해 구사한 바 있는 행정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지난 1993년 3월,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 관련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을 미일 관계에서 고립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의도가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정책은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과 대내적 경제 빈곤으로 인한 체제 위기의 불안과 특히 남한에 비해 경제력 격차와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개발 문제를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실 과거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연이어 구소련체제의 붕괴는 실로 북한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사건이었으므로, 북한의 정치·외교적 고립 심화가 북한의 통치 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독일 통일 이후에는 남한의 흡수 통일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에 노심초사하는 북한의 태도가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북한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편으로 소위 '우리식사회주의'를 내세워 내부적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핵무기의 보유를 강력하게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핵개발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여 이를 통한 대미·대일간의 외교·경제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양면성을 띤 행정책은, 대외적으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일본과의 협상 무기로 이용하는 것이며, 극단적 위험을 피하면서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대비하는 전술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핵문제를 통해 한반도의 문제 해결이 남북한 당사국이 아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을 배제하고 이러한 한국의 고립 상태를 역이용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꾸준한 접촉을 유도하며, 동시에 남북간의 경제 협력 등에서 최대한의 양보와 도움을 얻어내자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번 대만으로부터의 핵폐기물 반입 문제 역시 김일성 사망 이후 날로 어려워지

는 경제 실정과 대내적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추구하는 바 고도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등에 업어 미국을 자극시키고 대만과 한국의 불편한 관계를 이용하여 남한의 고립을 꾀하는, 소위 '국제 혁명 역량'<sup>22)</sup>을 강화해나간다는 통일 전선 전술의 책략적 수준에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최선의 강구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 최선의 대응 방안 강구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거래는 단순히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4축회담이나 경수로 건설 등으로 잠시 국제 관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대만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역이용하여 북한과 맺은 뒷거래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피하고 있는 대남 혁명 역량과 국제 혁명 역량을 다지고, 아울러 한국의 정황과 국제적 상황을 그들의 이해 관계에 맞추어나가려는 전술적 이면이 깔려 있다는 데 우리의 경각심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하는 방안으로써 이제는 온 국민의 총화 단결은 물론,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함께 UN 등 이 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국제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각적 협조를 강구하고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충심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로, 그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먼저 지적할 사항은 국가간의 분쟁은 감정적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때, 근간의 사안이 우리를 참담하게 하고 대만의 결정이 비도덕적 처사라 여겨질 소지도 있으나, 대만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거 한중 국교 관계의 개선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던지라, 그들의 과민한 반응도 당연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 현지 여론 조사 결과 대만인들의 43%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sup>23)</sup> 사실만으로도, 지난 1992년 8월 대만과의 국교 단절시 우리가 대

22) 북한은 70년대 이후, 소위 '남조선 적화 대남 혁명 역량'과 '국제 혁명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전술적 노선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해왔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대내외 정책에서 그 특징을 갖는 정책 내용으로, 우리가 곧잘 소홀히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23) 「문화일보」, 1997. 1.23; 「한국일보」, 1997. 2.10.

만을 어떻게 소홀히 대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더욱 깊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대만과 국교 단절 이후 늦었지만 꾸준히 대만의 입장에서 섬세했던 점을 안무함으로써, 막후 노력을 통해 기존의 우의를 다져나가는 일말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내 탓이오'의 겸허함과 정중한 태도로서 대만에 협조를 당부한다면, 不知者不罪의 범위를 넘어서 '贖罪者不罪'의 아량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면모를 상기할 때, 이번 일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 금이 갔던 양국의 우호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 믿어진다. 차제에 언급해두어야 할 점은, 이번 사태를 맞아 범국민적 대응이나 시위도 있어야 하겠지만, 대만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 향후에는 우리의 단기적 이해 관계를 앞세워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감정 표출과 혐오스런 행동으로 인해, 대만 정부를 자극하고 대만 국민을 분노케 하여 대사를 그르치게 하는 遇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할 점은 현재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하여 다방면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만과의 의리를 팽개치고 중국에 접근한다는 의식을 중국에 심어주어서는 결코 우리의 장기적 목표를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對중국 관계에서도 결코 얻는 바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한발 늦

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공지와 솔직하고 소신있는 대외 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만은 우리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그 행보를 함께해왔던 우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대만과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인해 다시 국교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신뢰를 바탕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양국간의 기본 관계를 충실히 하면서 정치·군사·외교 등의 영역에서 이제까지의 대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기타 경제 문제와 문화 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북한이 바라는 바 대만과 한국의 관계 악화를 기대하는 전술적 일면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정세의 주어진 상황에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대만 이야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야말로 중국의 견제 속에서 부단히 경제 발전을 유지한 대만의 어려움을 격려해주고 협력을 강구하는 슬기로움이 요

청되는 시기이다.

셋째, 적어도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대만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1일자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대만에서 한국통으로 알려진 대만 정부의 林秋山 감찰위원이 언급한 바, “대만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물 수입 의사를 밝혔던 지난해 초부터 한국 정부에 이를 알렸다”며 “대만은 협상 과정의 중요 부분을 그때그때 한국 정부에 적절한 외교 경로를 통해 알리고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대만·북한간의 핵폐기물 협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만의 폐기물 수출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sup>24)</sup>이라고 항변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2월 3일에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sup>25)</sup>

만일 임추산 위원장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계획과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통고받고 이를 묵살했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정부로서는 대만 정부에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건 경위를 재삼 살피고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종적인 방안으로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의 원천적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어떻게 설득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현실적 의도가 기울어져가는 경제의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지할 때, 비록 북한의 식량난이 결코 우리의 탓이 아니고 과거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권력층의 정책 실패로 인한 모순된 결과이지만, 현재의 우리로서는 이왕의 남북 경협 문제를 좀더 확대하고 북한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절단이라도 보내, 외교통로의 벼랑끝 외교를 추구하는 북한의 지도층에 발상 전환의 협상을 추진하는 최선의 노력과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극히 주도면밀한 방법으로써 우리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의 합심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라는 폐쇄 사회가 갖는 그 특징과 그들이 전개해왔던 외교 정책 자체가 일반적이고 상식적 수준의 범주를 벗어나 교묘한 방법으로써 진행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선의

24) 「문화일보」, 1997. 2.1.

25) 「문화일보」, 1997. 2.3.

를 유감없이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협약과 약속의 이행에 철저한 장치를 만듦과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 심리 전술이나 제반 외교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원만하고 유연성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한에 설득력을 갖는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구비함으로써,<sup>26)</sup> '당근과 채찍'이라는 대북 정책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전술적 신음과 전략적 허세에 걸맞는 대북 정책을 확립해야 함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특징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등의 제반 관계가 서로간에 밀접하고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의 정경 분리식 개별적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제반 행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원조와 정치적 입장에서 다른 면을 갖는 견결하고 단호한 대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치·경제·외교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의 확실하고도 명쾌한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 맺음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가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면서 대만과 북한에서 나오는 일련의 보도를 살펴볼 때, 1월 29일 대만은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과 관련, 북한측의 수송 및 처리 기술이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드러날 경우, 이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만측의 이러한 시사는 한국으로 하여금 IAEA나 국제 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 해법을 찾아달라는 간접적 태도를 보이는데<sup>27)</sup> 한편, 대만 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그 추진을 최대한 늦추는 입장을 보이는 듯하다.<sup>28)</sup>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미국이나 IAEA에 원칙적이고도 합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대만이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

26) 중국은 이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관하여 "환경 문제일 뿐 아니라 민감한 성격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마땅히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은 그 실상을 조사 중이다(『부산일보』, 1997. 1.29). 더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 북한이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했었던 4者회담의 공동설명회에 참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이 대내적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적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는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7) 『조선일보』, 1997. 1.30.

28) 지난 2월 1일 대만 행정원 원자력위원회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이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정식 조사를 거치고 신청 서류를 검토하자면 최소한 3~6 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聯合晚報』(臺北), 1997. 1.28; 『부산일보』, 1997. 1.29.

로 사료된다.

대만의 이러한 입장은 역시 지난 2월 1일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에 응한 임추산 위원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이번 핵폐기물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써 “북한의 안전 처리를 감시할 국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전하면서,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쉽지 않다. 대만이 한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대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sup>29)</sup>

북한의 경우도 대만이 처한 입장과 일맥상 통하는 면의 여지를 살필 수 있다. 즉, 북한은 지난 2월 17일 대만측에 핵폐기물 반입 일정을 늦춰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전력공사의 관계자는 이에 관하여 “반입 일정의 연기가 계획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오히려 국제 사회의 압력에 밀려 반입 계획이 아예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일단 계획 연기를 요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sup>30)</sup>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

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탐색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일 정책이나 북한의 핵정책에 우리의 주도적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일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우리의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도 대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제야말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고쳐나가는 의연함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최근 정치사가 비록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로서는 서로를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효율적 태도를 버리고, 홀연히 역사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솔직하고 당당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쏘국민은 물론 김영삼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당국자들의 이러한 참신한 자세의 구비야말로, 북한의 대남 정책을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의 ‘당근과 채찍’이라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분단과 대립 그리고 갈등의 서러움 속에서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해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으나, 결

29) 「중앙일보」, 1997. 2.3.

30) 「한겨레신문」, 1997. 2.18.

국 남북한 자체가 동일 민족의 한 국가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이 시점이야말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경제적 협력과 화해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기라고 사료된다.

흔히 국제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을 국제 정치의 근본적 속성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한 동일 민족으로서 결연히 그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남북 관계를 우리만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은 북한의 잘못된 처사를 두고 남한 ‘코리아’를 욕하고, 남한의 경제 발전에 비추어 북한 ‘코리아’의 빈곤함에 대해 냉소 처리하고 만다.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하루 속히 그 폐쇄성을 벗어나 과감하고도 진실한 역사의 행보를 걸어주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 전체 한국 민족의 절실함인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국제적 행동이 더이상 우리 한국 전체의 죄과로서 외국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으며, 명분없는 남북간의 불협 화음으로 인해 인접국의 이용물이 되어 한민족 전체의 장래가 불행해짐을 헌신적으로 막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할 내용은,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이 문제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향후의 바람직한 통일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 동안 겪어온 우리의 부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부문의 무질서와 일탈 행위는, 일반 국민의 가치관을 혼들어 놓았고 소리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한 다수의 인사들에게까지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시민 의식을 상실케 하였다고 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 내의 자유·평화·민주가 이루어진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화합과 신뢰가 굳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사고와, 책임있는 생활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